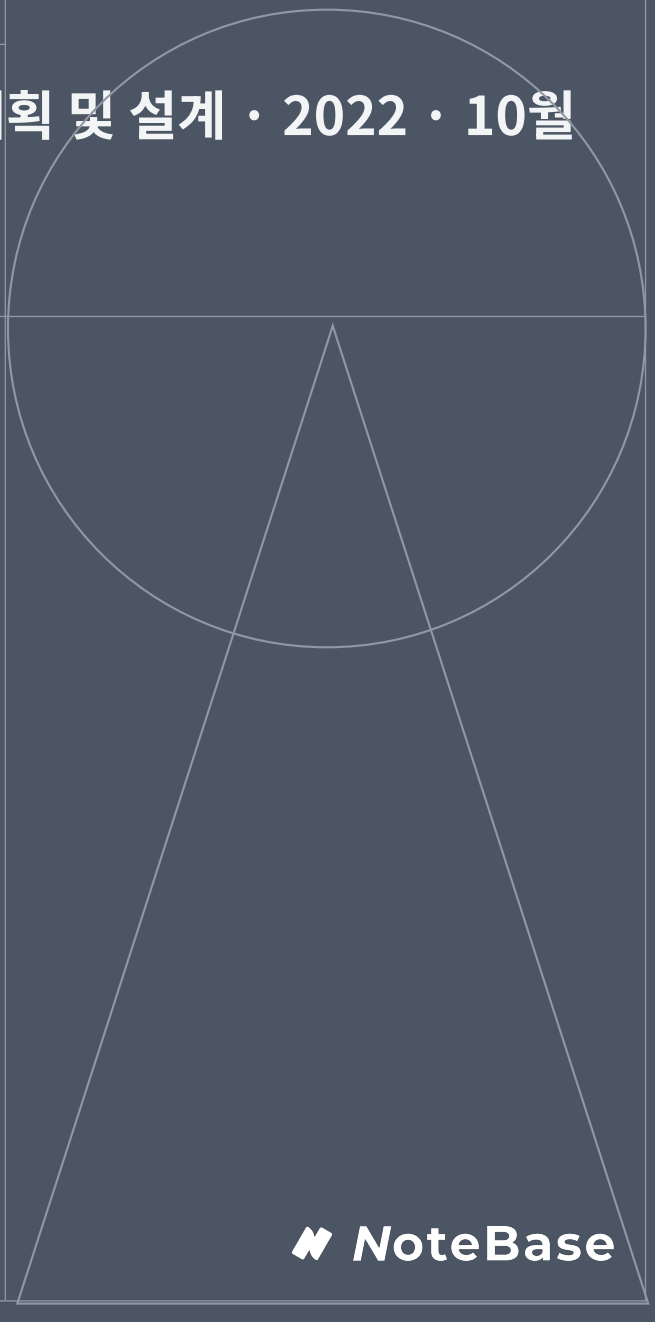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2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2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2 · 10월

문 1.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 가이드라인(국립생태원)」 상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시 조성목표 및 보전강도에 따른 식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연도에 따른 식재기준에서 반완성형은 5년 정도 경과 후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목표연도에 따른 식재기준에서 장래완성형은 10~20년 정도 경과 후 완성을 목표로 한다.

③ 핵심지역의 식재 밀도는 40~50주/100m^2로 한다.

④ 완충지역의 식재 밀도는 10~20주/100m^2로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 시 목표연도별 조성 유형과 보전강도별 지역별 식재 밀도 기준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반완성형은 약 5년 정도 경과 후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형태가 되도록 조성하는 유형이다.
장래완성형은 약 10~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완성되는 상태를 목표로 하는 유형이다.
식재 밀도 기준은 지역의 보전강도 단계별로 구분되므로 핵심지역, 완충지역 등의 명칭과 수치를 서로 바꾸어 외우면 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반완성형은 약 5년 정도가 지나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지도록 조성하는 개념이다. 목표연도 기준 설명이 맞다.
② O: 장래완성형은 10~20년 정도 경과 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유형이다. 장기적 생육과 천이를 고려한 설명으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핵심지역의 식재 밀도는 40~50주/100m^2"이다. 핵심지역의 식재 밀도 기준을 40~50주/100m^2로 제시한 것은 해당 기준과 맞지 않는다.
④ O: 완충지역의 식재 밀도를 10~20주/100m^2로 보는 설명은 이 문항의 식재기준 구분에서 맞는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목표연도 기준인 반완성형·장래완성형과 공간 기준인 핵심지역·완충지역의 식재 밀도를 한꺼번에 묻는다. 특히 핵심지역이라는 말만 보고 가장 높은 수치처럼 보이는 40~50주/100m^{2}를 그대로 맞다고 처리하면 함정에 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런 기준 문제는 먼저 시간축과 공간축을 분리해서 본다. 시간축에서는 반완성형은 약 5년, 장래완성형은 약 10~20년으로 판단하고, 공간축에서는 지역명과 식재 밀도 수치가 정확히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반완성형은 5년, 장래완성형은 10~20년이다. 식재 밀도 문제는 지역명과 수치의 짝을 그대로 확인한다.

NoteBase

문 2. 식물 군락의 이용현황에 따라 토지의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도는?

① 녹지자연도
② 식생구조도
③ 식생분포도
④ 생태자연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녹지자연도, 식생구조도, 식생분포도, 생태자연도의 작성 기준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녹지자연도는 식물 군락의 자연성 및 인간 이용 정도를 바탕으로 토지의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도이다.
식생구조도는 식생의 층위, 피도, 군락 구조 같은 내부 구조를 나타낸 지도이다.
식생분포도는 식생 유형이나 군락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나타낸 지도이다.
생태자연도는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를 종합하여 지역의 생태·자연 수준을 평가한 지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녹지자연도는 식물 군락의 이용 현황과 자연성을 기준으로 토지의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도이므로 발문과 일치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식생구조도'이다. 식생구조도는 교목층·관목층·초본층 같은 층위 구조나 군락 구조를 나타내는 지도이지, 토지의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도는 아니다. 올바르게는 구조를 보여 주는 지도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식생분포도'이다. 식생분포도는 식생이나 군락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 주는 지도이지, 이용 현황에 따라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도는 아니다. 올바르게는 분포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생태자연도'이다. 생태자연도도 자연성 평가와 관련되지만, 발문처럼 식물 군락의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토지 자연성을 등급화하는 지도는 아니다. 올바르게는 여러 생태 요소를 종합해 생태적 가치를 평가한 지도이다.

오답 포인트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는 모두 자연성과 등급 평가를 떠올리게 해서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녹지자연도는 식생과 이용 현황 중심의 자연성 등급이고, 생태자연도는 보다 종합적인 생태 가치 평가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 '식물 군락', '이용현황', '토지의 자연성 등급'이 함께 나오면 녹지자연도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구조를 묻으면 식생구조도, 위치를 묻으면 식생분포도, 종합 생태가치를 묻으면 생태자연도로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녹지자연도는 자연성 등급, 식생구조도는 구조, 식생분포도는 분포, 생태자연도는 종합 생태가치 평가이다.

NoteBase

문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중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고리도룡뇽
② 금개구리
③ 맹꽁이
④ 수원청개구리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양서류·파충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과 Ⅱ급의 종별 분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서 가장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분류이다.

핵심 구분

시행규칙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서 양서류·파충류 Ⅰ급에는 비바리뱀과 수원청개구리가 있고, 고리도롱뇽·금개구리·맹꽁이는 Ⅱ급에 속한다. 따라서 보기에서는 수원청개구리만 Ⅰ급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고리도롱뇽은 시행규칙상 양서류·파충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다.
틀린 표현: "Ⅰ급 중에 해당한다"
올바른 표현: "고리도롱뇽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해당한다"
② X: 금개구리는 시행규칙상 양서류·파충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다.
틀린 표현: "Ⅰ급 중에 해당한다"
올바른 표현: "금개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해당한다"
③ X: 맹꽁이는 시행규칙상 양서류·파충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다.
틀린 표현: "Ⅰ급 중에 해당한다"
올바른 표현: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해당한다"
④ O: 수원청개구리는 시행규칙상 양서류·파충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양서류·파충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서 이름이 익숙한 종을 모두 Ⅰ급으로 묶어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제는 보호대상 여부가 아니라 Ⅰ급과 Ⅱ급의 등급 구분을 정확히 외웠는지를 묻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종 이름을 보고 감으로 고르지 않고 시행규칙의 등급표를 떠올려 Ⅰ급 목록에 직접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보기 중 하나만 Ⅰ급이고 나머지가 Ⅱ급이면 그 등급 차이로 바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양서류·파충류 Ⅰ급은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이고 고리도롱뇽·금개구리·맹꽁이는 Ⅱ급이다.

NoteBase

문 4. 조경재료의 미적 특성과 시각적 요소 중 질감(texture)이 공간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형태나 색채를 배제하고, 단위요소나 패턴의 크기가 이루는 전체적인 질감의 느낌에 국한해 판단한다.)

① 일반적으로 잎의 크기에 따른 수관부 전체의 시각적 패턴에 의하면 칠엽수는 측백나무보다 고운 질감으로 볼 수 있다.

② 요소의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패턴은 고운 질감(fine texture)의 표면특성을 이루며, 일반적으로 거친 패턴에 비해 눈에 늦게 띈다.

③ 중간 질감(medium texture)의 패턴은 다른 질감 특성을 이어주는 전이요소가 될 수 있으며 통일성을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

④ 거친 질감(coarse texture)의 패턴은 일반적으로 관찰자와의 거리가 축소되어 보이고 공간도 좁게 느껴지게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질감을 단위요소의 크기와 밀도로 구분하고, 고운 질감·중간 질감·거친 질감이 공간감에 주는 시각적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운 질감은 작은 요소가 촘촘히 반복되어 세밀하게 느껴지는 질감이며, 일반적으로 뒤로 물러나 보이고 공간을 더 넓고 깊게 느끼게 한다.
거친 질감은 큰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 굵고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질감이며, 일반적으로 앞으로 나와 보이고 공간을 더 좁고 가깝게 느끼게 한다.
중간 질감은 고운 질감과 거친 질감 사이를 연결하는 완충적 성격의 질감으로, 서로 다른 재료 사이의 전이와 통일에 유리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칠엽수는 잎이 크고 수관 패턴이 굵게 인식되므로 측백나무보다 거친 질감에 가깝다. 측백나무는 잎과 가지 조직이 세밀하고 치밀하여 고운 질감으로 본다. 틀린 표현은 '칠엽수는 측백나무보다 고운 질감'이다. 올바르게는 '칠엽수는 측백나무보다 거친 질감으로 볼 수 있다'이다.

② O
요소의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으면 표면이 세밀하게 읽혀 고운 질감이 된다. 이런 패턴은 거친 질감보다 시각적 자극이 약해 즉각적으로 튀지 않으므로 눈에 늦게 띄는 설명이 맞다.

③ O
중간 질감은 너무 세밀한 질감과 너무 거친 질감 사이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재료 간 연결을 부드럽게 하고 전체 구성의 통일성을 높이는 전이요소가 될 수 있다.

④ O
거친 질감은 패턴이 크고 두드러져 시각적으로 전진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대상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관찰자와의 거리가 축소되어 보이며 공간도 상대적으로 좁게 인식된다.

오답 포인트

수목 예시가 나오면 식물명보다 잎과 가지가 만드는 전체 패턴의 크기를 먼저 봐야 한다. ①은 칠엽수의 큰 잎을 보고도 고운 질감으로 뒤집어 서술한 점이 함정이며, ②와 ④는 fine은 후퇴하고 coarse는 전진한다는 공간 효과를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감 문제는 형태와 색채를 빼고 단위요소의 크기와 밀도만 본다. 작고 촘촘하면 fine, 크고 두드러지면 coarse로 판단하고, fine은 멀고 넓게, coarse는 가깝고 좁게 보인다는 방향으로 선지를 검토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작고 촘촘하면 고운 질감으로 멀고 넓게 보이며, 크고 굵으면 거친 질감으로 가깝고 좁게 보인다.

NoteBase

문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원의 종류별 규모 기준과 공원시설 부지면적률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원시설 부지면적률은 해당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① 구분(종류): 생활권 공원(어린이공원), 규모의 기준: 1천5백제곱미터 이상, 공원시설 부지면적률: 100분의 60 이하

② 구분(종류): 생활권 공원(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규모의 기준: 10만제곱미터 이상, 공원시설 부지면적률: 100분의 40 이하

③ 구분(종류): 주제공원(역사공원), 규모의 기준: 제한 없음, 공원시설 부지면적률: 100분의 60 이하

④ 구분(종류): 주제공원(체육공원), 규모의 기준: 1만제곱미터 이상, 공원시설 부지면적률: 100분의 50 이하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상 공원 종류별 규모 기준과 공원시설 부지면적률의 대응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역사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률이 제한 없음인지 100분의 60 이하인지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공원시설 부지면적률은 해당 도시공원 면적 중 공원시설 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핵심 구분

규모 기준은 별표 3, 공원시설 부지면적률은 별표 4에서 확인하는 항목이다.
어린이공원은 1천5백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60 이하이다.
도시지역권근린공원은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 이하이다.
역사공원은 규모 기준은 제한 없음이고 공원시설 부지면적률도 제한 없음이다.
체육공원은 1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 이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생활권공원인 어린이공원의 규모 기준은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원시설 부지면적률은 100분의 60 이하이므로 옳다.

② O
생활권공원인 도시지역권근린공원의 규모 기준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원시설 부지면적률은 100분의 40 이하이므로 옳다.

③ X
주제공원인 역사공원의 규모 기준을 제한 없음으로 본 부분은 맞지만, 공원시설 부지면적률을 100분의 60 이하로 본 부분이 틀리다. 역사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률은 제한 없음이다.
틀린 표현: 공원시설 부지면적률 100분의 60 이하
올바른 표현: 공원시설 부지면적률 제한 없음

④ O
주제공원인 체육공원의 규모 기준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원시설 부지면적률은 100분의 50 이하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역사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의 부지면적률이 모두 비슷하다고 보면 틀리기 쉽다.
역사공원은 제한 없음인데, 체육공원의 100분의 50 이하나 어린이공원의 100분의 60 이하와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원 종류별 규모 기준과 공원시설 부지면적률을 분리해서 본다. 그다음 역사공원·문화공원은 제한 없음, 도시지역권근린공원은 100분의 40 이하, 체육공원은 100분의 50 이하, 어린이공원은 100분의 60 이하로 대응시키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역사·문화는 제한 없음, 체육은 50, 도시지역권근린은 40, 어린이는 60이다.

NoteBase

문 6. 자연공원법령상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②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③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④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마을지구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 예외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공원관리청의 허가 = 공원구역에서 일정 행위를 하려면 미리 받아야 하는 행정상 허가이다.
경미한 행위 = 자연공원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대통령령으로 허가 예외를 둔 행위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건축, 식물 채취, 가축 방목처럼 공원구역의 현상을 바꾸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다만 공원마을지구에서의 자생종 식재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이 직접 열거한 허가 대상이다.
틀린 표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
올바른 표현: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② X.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도 공원구역의 자연 상태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틀린 표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
올바른 표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③ X.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다. 일부 공원마을지구의 소규모 사육처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선지처럼 일반적으로 적으면 허가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틀린 표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④ O.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공원마을지구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는 시행령상 경미한 행위 예외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는 행위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법률에 열거된 허가 대상 행위와 시행령이 따로 둔 경미한 행위 예외를 섞으면 틀리기 쉽다. 특히 ③은 방목 일반과 공원마을지구의 제한적 예외를 구별하지 못하면 흔들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법률에 허가 대상으로 직접 열거된 행위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시행령이 정한 공원마을지구·영림계획·자생종 같은 예외 사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원구역 행위는 원칙 허가, 공원마을지구의 자생종 식재는 예외이다.

NoteBase

문 7. 「자연환경보전법」상 도시생태현황지도(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작성한다.

②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10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주체, 재작성 주기, 축척 기준, 비용 지원 주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재작성 주기가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점과, 조문에 적힌 작성 기준이 '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도시생태현황지도 =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 · 자연도를 말하며,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계획 검토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핵심 구분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생태 · 자연도를 기초로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한다. 또한 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하고, 비용 지원은 주무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즉 재작성 주기는 의무 규정이고, 비용 지원은 재량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 구분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2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주무부 장관이 작성한 생태 · 자연도를 기초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 이 선지는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확히 적었다.

② X
- 틀린 이유는 재작성 주기를 '10년마다'라고 한 부분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틀린 표현: "10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올바른 표현: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O
-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축척 기준을 정확히 적은 선지이므로 옳다.

④ O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맞다. 이 선지는 비용 지원의 가능 주체와 지원 범위를 올바르게 적었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재작성 주기와 비용 지원 규정의 문언을 함께 외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②의 '10년마다'는 장기계획 주기처럼 보이므로 헷갈리기 쉽지만,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년 주기라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시생태현황지도 문제가 나오면 먼저 작성 기초가 생태 · 자연도인지, 다음으로 재작성 주기가 5년인지, 마지막으로 축척 5천분의 1 이상과 비용 지원 가능 규정을 순서대로 대조하면 된다. 숫자 선지는 주기와 축척부터 확인하면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생태 · 자연도를 기초로 하고, 5년마다 다시 작성하며, 5천분의 1 이상으로 표시한다.

NoteBase

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연경관지구

② 특화경관지구

③ 시가지경관지구

④ 생태경관지구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관지구의 세부 유형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경관지구의 세부 유형과 보호지구의 세부 유형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이나 시가지 경관,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한 용도지구이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적 가치, 중요시설물, 생태계 등 보존 대상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용도지구이다.

핵심 구분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한다.
반면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한다.
즉 경관지구와 보호지구의 세부 명칭이 서로 섞이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경관지구이므로 시행령상 경관지구에 해당한다.
② O
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한 경관지구이므로 맞는 표현이다.
③ O
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지·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한 경관지구이므로 맞다.
④ X
생태경관지구라는 명칭은 시행령상 경관지구의 세부 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 생태경관지구
올바른 표현: 생태계보호지구는 보호지구의 세부 유형이고, 경관지구의 세부 유형은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이다.

오답 포인트

경관을 보호한다는 말 때문에 ④를 경관지구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행령은 생태 관련 지구를 경관지구가 아니라 보호지구의 세부 유형인 생태계보호지구로 규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도지구 문제는 이름의 앞부분만 보지 않고 어느 큰 분류에 속하는지부터 본다. 자연·시가지·특화는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는 보호지구로 묶어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경관지구는 자연·시가지·특화, 생태계는 보호지구이다.

NoteBase

문 9. 조경계획의 환경분석 시 경관 및 일조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조망 대상이 되는 경관자원의 조망빈도와 조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한다.

② 중, 고층 건물의 건설 완료 시 하지일의 평균시에 의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일영이 발생되는 지역을 조사범위로 한다.

③ 경관자원목록 중에서 우선 보전하거나 복원 및 활용해야 하는 경관자원의 순위를 부여하고 경관자원으로서의 조망과 관리현황을 분석한다.

④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자원으로서 지형, 지물, 식생, 역사 및 문화자원 등을 조사하고 경관자원목록을 작성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관분석의 조망점 선정과 경관자원목록 작성, 일조분석의 기준일과 시간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관분석은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을 조사해 목록화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와 관리 상태를 함께 파악하는 과정이다.
일조분석은 건축물로 인해 생기는 일영의 범위와 시간을 검토하는 과정이며, 그림자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조망점은 피조망 대상 경관자원이 실제로 많이 보이는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2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피조망 대상 경관자원이 자주, 많이 보이는 지점을 조망점으로 잡아야 실제 경관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조망빈도와 조망량이 큰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② X
틀린 부분은 '하지일의 평균시'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이다. 중·고층 건물의 일조분석은 일반적으로 그림자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기준도 진태양시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일영 발생 범위를 본다. 올바르게는 '동지일의 진태양시에 의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일영이 발생되는 지역을 조사범위로 한다'에 가깝다.

③ O
경관자원목록을 만든 뒤에는 어떤 자원을 우선 보전·복원·활용할지 순위를 정하고, 해당 자원의 조망 상태와 관리현황을 분석한다. 경관자원 평가의 일반적 절차에 맞는 설명이다.

④ O
지형, 지물, 식생, 역사·문화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요소를 조사해 경관자원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경관분석의 출발 단계이다. 어떤 자원이 경관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먼저 정리해야 이후 보전과 활용 판단이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2번은 일조분석의 기준일을 하지일로 바꾸고 시간기준도 오후 6시까지 늘려 놓아 헷갈리게 만든 선지이다.
일조분석은 햇빛이 가장 긴 하지가 아니라 그림자가 가장 길어지는 동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놓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조분석 선지는 먼저 기준일이 동지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시간기준이 진태양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인지 본다. 경관분석 선지는 경관자원 조사와 목록 작성, 조망점 선정, 보전·복원 우선순위와 관리현황 분석의 흐름에 맞는지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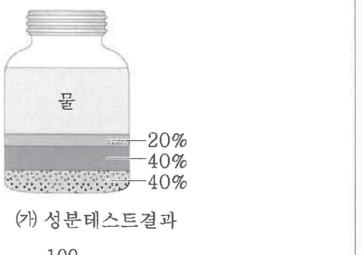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경관은 경관자원목록과 조망점이 핵심이고, 일조는 동지일·진태양시·오전 8시~오후 4시가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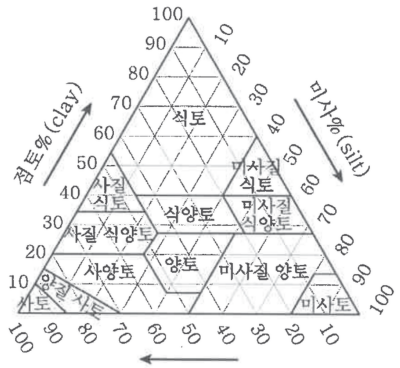
NoteBase

문 10. 조경계획 대상지의 토양을 채취하여 물과 함께 병에 담아 흔든 다음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보기>의 (가)와 같이 모래, 점토, 미사가 층을 이루었다. (가)의 결과와 토성분류표 (나)를 근거로 해독할 때 해당하는 토양의 종류는?

<보기>



(가) 성분테스트결과



(나) 토성분류표

① 사질 양토

② 양토

③ 미사질 식양토

④ 미사질 양토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침전층의 위치로 모래·미사·점토의 비율을 읽고, 그 비율을 토성분류 삼각도표에 대입하여 토양 종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사질 양토는 양토보다 모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토양이다. 이 문항은 모래 40%, 미사 40%, 점토 20%이므로 사질 양토 구역까지 가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사질 양토'이며, 올바르게는 '양토'이다.
② O: 모래 40%, 미사 40%, 점토 20%는 토성분류 삼각도표에서 양토 영역에 해당한다. 병의 층을 아래 모래, 중간 미사, 위 점토로 읽으면 정답이 바로 양토로 결정된다.
③ X: 미사질 식양토는 미사 비율이 높으면서 점토도 더 많은 편에 속한다. 이 문항은 점토가 20%에 그쳐 식양토 계열로 올라가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미사질 식양토'이며, 올바르게는 '양토'이다.
④ X: 미사질 양토는 미사 비율이 양토보다 더 높고 모래 비율은 더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미사 40%로 미사질 양토 구역까지 가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미사질 양토'이며, 올바르게는 '양토'이다.

오답 포인트

침전병의 층 순서를 거꾸로 읽거나, 토성분류표에서 모래 축의 방향이 반대로 표시된 점을 놓치면 사질 양토나 미사질 양토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비율 계산이 아니라 층의 의미와 삼각도표 축 방향을 정확히 연결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침전 시험 문제는 먼저 아래층이 모래, 중간층이 미사, 위층이 점토라는 점을 확정한다. 그다음 각 비율을 읽어 삼각도표의 세 축에 그대로 옮기고, 세 성분의 교차 영역 이름을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침전병은 아래 모래, 가운데 미사, 위 점토이며 40-40-20 조합은 양토이다.

NoteBase

문 1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상 도시공원의 세분에서 지정하고 있는 주제공원이 아닌 것은?

① 가로공원
② 놀이공원
③ 휴양공원
④ 생태공원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상 주제공원의 종류를 정확히 열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조례에 명시된 유형과 이름만 비슷한 유형을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별도로 특정 기능이나 이용 목적에 맞추어 설치하는 도시공원 유형이다.

핵심 구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조는 조례상 주제공원을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조례의 열거에 없는 휴양공원은 서울시 조례상 주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로공원은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주제공원이다.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휴식과 경관 개선 기능을 담당하는 유형으로 본다.

② O
놀이공원은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주제공원이다.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여가와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유형이다.

③ X
휴양공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조의 주제공원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휴양공원
올바른 표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상 주제공원은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이다.

④ O
생태공원은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주제공원이다. 생물서식공간 조성과 생물다양성 증진, 시민 휴식 기능을 함께 가지는 유형이다.

오답 포인트

휴양공원은 이름만 보면 공원 유형으로 매우 그럴듯하여 오답으로 고르기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반 상식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의 열거를 그대로 묻는 문제이므로, 조문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공원 유형을 열거하는 문제는 비슷한 명칭이라도 조문에 없으면 제외한다. 특히 열거형 규정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적힌 것'만 정답 판단 기준이 된다.

암기 포인트

서울시 주제공원은 생-놀-가, 즉 생태공원·놀이공원·가로공원이다.

NoteBase

문 12. <보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대한 규정이다. (가)와 (나)에 알맞은 규모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가)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나) 제곱미터 이상인 것

① (가): 5,000, (나): 5,000
② (가): 5,000, (나): 7,500
③ (가): 5,000, (나): 10,000
④ (가): 10,000, (나): 30,000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자연공원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 면적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의 면적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이 본격 승인되기 전에 일정 면적 이상이면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이다.
공원자연보존지구 = 자연공원 안에서도 보전 강도가 가장 높은 지구이다.

핵심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반면 제18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의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는 7,50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 5,000은 맞지만 (나) 5,000이 틀렸다.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의 기준은 7,500제곱미터이다.
- 틀린 표현: (나) 5,000
- 올바른 표현: (나) 7,500

② O
- (가)를 5,000, (나)를 7,500으로 짝지었으므로 별표 4의 기준과 일치한다.

③ X
- (가) 5,000은 맞지만 (나) 10,000이 틀렸다. 이 지구군의 기준은 10,000이 아니라 7,500제곱미터이다.
- 틀린 표현: (나) 10,000
- 올바른 표현: (나) 7,500

④ X
- (가) 10,000과 (나) 30,000이 모두 틀렸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000,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는 7,500이 기준이다.
- 틀린 표현: (가) 10,000, (나) 30,000
- 올바른 표현: (가) 5,000, (나) 7,500

오답 포인트

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모두 같은 면적으로 외우면 ①로 끌려가기 쉽다. 이 문항은 지구 명칭은 비슷하지만 보존지구만 5,000이고 나머지 세 지구는 7,500으로 나뉜다는 점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공원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항은 먼저 「자연공원법」 제18조의 지구 종류를 나눈 뒤, 보존지구인지 아니면 자연환경·마을·문화유산 지구 묶음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보존지구이면 5,000, 나머지 세 지구 묶음이면 7,500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존 5천, 환경·마을·문화 7천5백이다.

NoteBase

문 1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상 해당시설 건축이 가능한 서울특별시의 어느 부지(대지면적 $2,000m^2$)에 건축바닥면적 합계가 $7,000m^2$인 문화시설을 신축한다고 할 때, 공개공지 조경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 면적은 $100m^2$ 이상이다.

②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에 공개공지 한 면의 최소 1/2 이상이 접하여야 하고, 일반인이 계단 없이 접근 가능하며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③ 공개공지를 2개소로 나누어 설치할 수 있으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0제곱미터 이상이다.

④ 공개공지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에 설치하는 면적만큼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상 문화시설의 공개공지 설치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공개공지의 의무면적, 도로 접면 기준, 분할 설치 기준, 지하 설치 시 산입 범위를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공개공지 =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확보하는 개방공간이다.

핵심 구분

문화시설로서 공개공지 확보 대상에 해당하면 공개공지 면적과 설치형태는 조례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이 문항의 조건에서는 공개공지 면적이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므로 2,000제곱미터의 5퍼센트인 1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 접면은 가장 넓은 도로변에 공개공지 한 면의 최소 4분의 1 이상이 접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를 둘로 나누어 설치할 수는 있으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지하부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어도 그 면적 전부가 아니라 2분의 1만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2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의 5퍼센트는 100제곱미터이므로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② X
공개공지는 가장 넓은 도로변에 접하도록 설치하되, 공개공지 한 면의 최소 4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하면 된다. 일반인이 계단 없이 접근 가능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라는 설명은 맞지만 접면 비율을 2분의 1로 쓴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한 면의 최소 1/2 이상"
올바른 표현: "한 면의 최소 1/4 이상"

③ X
공개공지를 2개소로 나누어 설치할 수는 있으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0제곱미터가 아니다.
틀린 표현: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0제곱미터 이상이다"
올바른 표현: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X
공개공지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하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부분에 설치한 면적은 전부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에 한하여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한다.
틀린 표현: "설치하는 면적만큼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설치하는 면적의 2분의 1에 한하여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접면 비율을 크게 부풀린 표현이 함정이고, ③은 최소면적을 과소하게 제시한 함정이며, ④는 지하 설치 면적의 산입범위를 전부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숫자 기준과 원칙·예외의 산입범위를 함께 묻는 전형적인 조문형 오답 구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개공지 문제는 먼저 대상건축물 여부를 본 뒤 의무면적, 도로 접면 비율, 분할 설치 최소면적, 지하 설치 시 산입비율 순서로 숫자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특히 "전부 산입"인지 "일부만 산입"인지와 "할 수 있다"인지 "하여야 한다"인지를 구분하면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공개공지는 면적기준, 도로 4분의 1 접면, 지하 설치는 2분의 1 산입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상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관할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 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 기간 산정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위탁에서는 공원시설 등의 관리 ·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상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방식과 위탁기간 연장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을 구별하고 연장 규정이 수의계약 재위탁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제한경쟁은 시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 범위를 제한하는 경쟁방식이다.
수의계약은 법령상 예외사유가 있을 때 경쟁절차 없이 특정 상대방과 계약하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공원시설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 · 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으로 선정할 수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위탁기간 연장은 일반경쟁 위탁 전반에 붙는 규정이 아니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위탁을 다시 계약하려는 경우에만 3년 범위에서 한 차례 인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6조제1항의 내용과 같다.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관할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O
제6조제2항 단서의 내용과 같다. 공원시설 관리위탁은 일반경쟁이 원칙이지만, 운동시설 · 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O
제7조제1항의 내용과 같다.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이고,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는 예외로 둔다.

④ X
문제의 핵심 오류는 연장 요건의 적용 대상을 일반경쟁입찰 위탁으로 바꿔 놓은 점이다. 제7조제2항과 제3항의 연장 규정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계약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틀린 표현: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위탁에서는"
올바른 표현: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위탁에서,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계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원시설 등의 관리 ·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공원시설 등의 관리 ·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진짜 문구를 넣어 두고, 그 앞의 적용 대상을 일반경쟁입찰로 바꿔 함정을 만든 선지이다. 수탁자 선정 규정인 제6조와 위탁기간 연장 규정인 제7조를 섞어 읽으면 쉽게 속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선지가 수탁자 선정 단계의 규정인지, 위탁기간과 연장 단계의 규정인지부터 나누어 본다.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수의계약은 선정 방식의 문제이고, 연장 문구가 보이면 제7조의 수의계약 재위탁 규정인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선정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특수시설은 제한경쟁이 가능하며, 연장은 수의계약 재위탁에만 한 차례 붙는다.

NoteBase

문 15. 건축법령상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③ 연면적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④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의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면제 대상과 제2항의 별도 조경 기준 적용 대상을 나누는 것이다.

용어 풀이

대지의 조경 =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때 조례 기준에 따라 식재, 조경시설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 구분

건축법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경 조치를 요구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일정 규모 미만의 물류시설 등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항시설은 같은 조 제1항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별도의 조경 기준이 정해지는 대상이므로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상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② O: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은 조경 조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③ O: 연면적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중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조경 조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④ X: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예외 대상으로 공항시설'이라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공항시설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 별도 조경 기준 적용 대상으로 정리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공항시설도 특수시설이므로 조경 의무가 면제될 것처럼 보이게 한 점이다. 그러나 공장·산업단지 공장·소규모 물류시설은 면제 대상이고, 공항시설은 별도 기준 대상이라는 위치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지의 조경 문제에서는 먼저 원칙상 조경 의무가 있는지 보고, 다음으로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목록인지 확인한다. 제2항의 별도 조경 기준 대상은 제1항의 면제 대상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조경 면제는 공장·산업단지 공장·소규모 물류시설이고, 공항시설은 면제가 아니라 별도 조경 기준이다.

NoteBase

문 16.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상 비오톱 최소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오톱 최소면적은 도시생태현황지도에 표현되는 비오톱 폴리곤 면적의 최소 기준을 말한다.

② 비오톱 최소면적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해상도와 자세함을 표현하는 단위이다.

③ 비오톱 최소면적이 작을수록 자세한 지도이다.

④ 비오톱 최소면적은 $400m^2$(20m×20m)~$3,600m^2$(60m×60m)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현황에 맞게 사용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상 비오톱 최소면적의 정의, 의미, 수치 범위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비오톱 최소면적은 도시생태현황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비오톱 폴리곤의 최소 크기이다. 이 값이 작을수록 더 잘게 구분하므로 지도가 더 자세해진다.

핵심 구분

지침 제3조제9호는 비오톱 최소면적을 비오톱 폴리곤 면적의 최소 기준으로 보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해상도와 자세함을 표현하는 단위라고 정한다. 또한 최소면적이 작을수록 자세한 지도이며, 사용 범위는 $100m^2$(10m×10m)~$2,500m^2$(50m×50m)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침 제3조제9호는 비오톱 최소면적을 도시생태현황지도에 표현되는 비오톱 폴리곤 면적의 최소 기준이라고 정의한다.
② O: 같은 규정은 비오톱 최소면적이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해상도와 자세함을 표현하는 단위라고 밝힌다.
③ O: 최소면적이 작을수록 더 작은 공간까지 구분할 수 있으므로 지도가 더 자세해진다.
④ X: 틀린 부분은 면적 범위이다. 지침상 범위는 $400m^2$~$3,600m^2$가 아니라 $100m^2$(10m×10m)~$2,500m^2$(50m×50m)이다. 틀린 표현은 "$400m^2$(20m×20m)~$3,600m^2$(60m×60m)"이고, 올바른 표현은 "$100m^2$(10m×10m)~$2,500m^2$(50m×50m)"이다.

오답 포인트

정의와 기능을 묻는 ①~③은 모두 지침 문언과 일치하므로, 숫자 범위를 대충 외우면 ④에 흔들리기 쉽다. 특히 20m, 60m처럼 그럴듯한 제곱 단위를 제시해 실제 기준처럼 보이게 만든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침형 문항에서는 먼저 정의 문장, 다음으로 기능 문장, 마지막으로 수치 범위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된다. 숫자가 들어간 선지는 원문 수치와 시작값·끝값을 그대로 맞춰 본다.

암기 포인트

비오톱 최소면적은 작을수록 자세하고, 기준 범위는 $100m^2$~2, $500m^2$이다.

NoteBase

문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② 국립공원계획

③ 국가도시공원

④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실제로 규정된 계획·공원·구역 명칭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의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이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조성하는 도시공원 개념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핵심 구분

공원녹지법은 도시 안의 공원·녹지 체계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루는 법률이다. 반면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체계의 개념이므로 국립공원계획은 공원녹지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1번 O: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법정계획이다. 도시의 공원·녹지 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이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번 X: 국립공원계획은 국립공원 제도와 연결되는 자연공원법상의 계획 개념이다. 틀린 표현은 '국립공원계획'이다. 올바르게는 공원녹지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정답 선지이다.
3번 O: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공원 관련 개념이다. 국가가 관여하는 도시공원 제도를 다루므로 공원녹지법의 범위 안에 있다.
4번 O: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공원이 아니라 구역이라는 점만 다를 뿐 공원녹지법상 개념인 것은 같다.

오답 포인트

도시공원과 국립공원을 모두 '공원'으로만 묶어 보면 법률 체계를 놓치기 쉽다. 이 문제는 도시공원·녹지 체계와 자연공원 체계를 섞어 놓고 법률 소관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용어가 도시 안의 공원·녹지 관리인지, 자연공원인 국립공원 체계인지부터 먼저 가른다.
도시공원·녹지·도시자연공원구역이면 공원녹지법, 국립공원이면 자연공원법으로 판단하면 정리가 된다.

암기 포인트

도시공원은 공원녹지법,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18. <보기>와 같은 캠핑장을 계획하려 한다. 시설면적(m^2)과 최대 예약 가능한 팀 수의 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유사한 시설을 참고하여 연간이용자는 18,000명으로 상정함
• 최대일률은 3계절형으로 1/60을 적용하고, 회전율은 5시간 체재시간 기준으로 1/1.5를 적용함
• 한 팀당 인원은 평균 2.5명을 적용함(이용자 수, 팀 수는 소수점 이하 올림)
• 캠핑장 한 팀의 시설면적은 $30m^2$를 적용함
• 생태적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시설의 90%를 예약제로 운영함

① 시설면적(m^2): 2,400, 최대 예약 가능 팀 수: 56
② 시설면적(m^2): 2,400, 최대 예약 가능 팀 수: 72
③ 시설면적(m^2): 3,600, 최대 예약 가능 팀 수: 72
④ 시설면적(m^2): 3,600, 최대 예약 가능 팀 수: 9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간이용자 수에서 최대일 이용 팀 수를 구한 뒤 회전율과 예약제 운영비율을 적용하여 필요한 시설면적과 최대 예약 가능 팀 수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연간이용자 18,000명, 최대일률 3계절형 1/60, 회전율 1/1.5, 한 팀당 2.5명, 팀당 시설면적 $30m^2$, 예약제 운영비율 90%이다.
구해야 할 값: 시설면적과 최대 예약 가능한 팀 수이다.
주의할 조건: 최대일 이용자 수를 먼저 구하고, 이를 팀 수로 환산한 뒤, 회전율을 적용해 필요한 시설 팀 수를 산정하고, 마지막에 예약제 비율을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최대일 이용자 수 = 연간이용자 수 × 최대일률이다.
최대일 팀 수 = 최대일 이용자 수 ÷ 팀당 인원이다.
필요 시설 팀 수 = 최대일 팀 수 × 회전율이다.
시설면적 = 필요 시설 팀 수 × 팀당 시설면적이다.
최대 예약 가능한 팀 수 = 필요 시설 팀 수 × 0.9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연간이용자 수, 최대일률, 팀당 인원, 회전율, 팀당 면적, 예약제 비율을 차례로 모두 적용하도록 조건을 주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단계: 최대일 이용자 수는 18,000 × 1/60 = 300명이 된다.
2단계: 최대일 팀 수는 300 ÷ 2.5 = 120팀이 된다.
3단계: 필요한 시설 팀 수는 120 × 1/1.5 = 80팀이 된다.
4단계: 시설면적은 80 × 30 = 2400이므로 $2400m^2$이다.
5단계: 최대 예약 가능한 팀 수는 80 × 0.9 = 72팀이 된다.

선지 판단

① X: 시설면적 $2400m^2$는 맞지만, 80팀의 90%는 72팀이므로 "최대 예약 가능한 팀 수 56"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최대 예약 가능한 팀 수 72"이다.
② O: 계산 결과 필요한 시설면적은 $2400m^2$, 최대 예약 가능한 팀 수는 72팀이므로 제시값이 모두 맞다.
③ X: "시설면적 $3600m^2$"가 틀렸다. 72팀을 예약 가능 팀 수로 두면 총 시설 팀 수는 80팀이므로 시설면적은 $2400m^2$이어야 한다. $3600m^2$라면 총 시설 팀 수는 120팀이 되어 예약 가능 팀 수는 108팀이 된다.
④ X: "시설면적 $3600m^2$, 최대 예약 가능한 팀 수 90"이 모두 틀렸다. 최대일 팀 수 120팀을 그대로 시설 팀 수로 오해하면 $3600m^2$가 나오지만, 회전율 1/1.5를 적용하면 필요한 시설 팀 수는 80팀으로 줄어든다. 올바르게는 "시설면적 $2400m^2$, 최대 예약 가능한 팀 수 72"이다.

오답 포인트

최대일 팀 수 120팀과 필요한 시설 팀 수 80팀을 구분하지 않으면 $3600m^2$ 같은 오답이 나온다. 또한 예약제 운영 90%는 마지막에 적용해야 하므로 56팀이나 90팀처럼 조건에 없는 값이 나오지 않도록 단계 순서를 지켜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캠핑장 수요 산정 문제는 연간이용자 수에서 최대일률을 적용해 일최대 수요를 구하고, 이를 팀 수로 바꾼 뒤, 회전율을 적용해 필요한 시설 팀 수를 산정하고, 마지막에 예약제 비율과 팀당 시설면적을 반영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연간이용자 → 최대일 이용자 → 최대일 팀 수 → 회전율 적용 시설 팀 수 → 예약 가능 팀 수·시설면적 순서이다.

NoteBase

문 19. 축척이 1/50,000인 지형도의 어떤 사면 경사를 알기 위해 인접한 주곡선상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도면상 수평 최단거리가 0.8cm였을 때 이 두 점의 사면경사도의 값[%]은?

① 2
② 5
③ 7
④ 8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축척으로 도상거리를 실제 수평거리로 환산한 뒤 경사도 공식을 적용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축척: 1/50,000
- 도면상 수평 최단거리: 0.8cm
- 인접한 주곡선 간 표고차: 20m

구해야 할 값:
- 두 점 사이 사면 경사도(%)

주의할 조건:
- 도상거리는 실제 수평거리로 먼저 환산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경사도는 경사도(\%)=(표고차)/(수평거리)× 100 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사면 경사도는 높이 차를 수평거리로 나눈 비율이므로, 인접 주곡선의 표고차와 도상에서 잰 수평 최단거리를 실제 거리로 바꾸어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축척 1/50,000에서 도상거리 0.8cm는 실제거리 $0.8 \times 50{,}000 = 40{,}000cm$ 이다.
2. $40{,}000cm = 400m$ 이므로 수평거리는 400m이다.
3. 1/50,000 지형도에서 인접 주곡선 간 표고차는 20m이므로, 경사도는 $\frac{20}{400} \times 100 = 5\%$ 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2%는 표고차를 지나치게 작게 보거나 수평거리를 크게 잘못 잡을 때 나오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인접 주곡선 간 표고차 20m와 수평거리 400m를 적용하여 5%가 된다.
② O: 실제 수평거리 400m, 표고차 20m이므로 경사도는 20/400 × 100 = 5% 이다.
③ X: 7%는 계산값보다 큰 수치로, 표고차를 28m처럼 잘못 보거나 거리 환산을 틀리면 나올 수 있다. 올바르게는 표고차 20m 기준이므로 5%가 된다.
④ X: 8%는 수평거리 환산을 누락하거나 250m처럼 잘못 적용할 때 가까워지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0.8cm를 실제 400m로 환산한 뒤 계산하여 5%가 된다.

오답 포인트

축척 환산을 생략하고 도상거리 0.8만 바로 넣거나, 인접 주곡선의 표고차를 문제에서 따로 주지 않았다고 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문항의 함정은 도상거리의 실제거리 환산과 1/50,000 지형도의 주곡선 간격 20m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형도 경사 계산은 먼저 축척으로 수평거리를 실제거리로 바꾸고, 다음에 인접 등고선의 표고차를 확인한 뒤 표고차/수평거리× 100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사도는 표고차를 실제 수평거리로 나눈 백분율이며, 1/50,000 지형도의 인접 주곡선 간격은 20m로 본다.

NoteBase

문 2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정원 시설기준 및 지정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원의 총면적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정원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정원 관리 전담인력이 8명 이상일 것

③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을 것

④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정원 시설기준 및 지정요건 중 면적 예외, 조직·인력 요건, 운영실적 기간, 평가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국가정원 지정요건 =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시행령 별표에서 요구하는 요건이다.
운영 실적 =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뒤 실제 운영·관리해 온 기간과 그 평가결과를 말한다.

핵심 구분

면적은 원칙적으로 30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도 가능하다.
조직·인력은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정원 관리 전담인력이 8명 이상이어야 한다.
운영실적은 지방정원 등록일부터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2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국가정원의 시설기준은 정원의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도 허용하므로 선지의 취지가 맞다.

② O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정원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정원 관리 전담인력이 8명 이상일 것이 포함된다. 인력 수와 전문인력 포함 요건을 함께 묻는 선지이므로 옳다.

③ X
틀린 이유는 운영 실적 기간을 1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시행령상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틀린 표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올바른 표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

④ O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이 포함된다. 운영기간 요건과 별도로 평가점수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운영실적 요건을 읽을 때 기간과 평가를 따로 보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운영 실적 3년 이상"과 "최근 3년 이내 평가 70점 이상"을 함께 두고, 기간만 1년으로 바꾼 ③을 함정으로 만든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정원 기준 문제는 면적·시설, 조직·인력, 운영실적의 세 묶음으로 나누어 본다. 운영실적 묶음에서는 등록 후 기간이 3년인지, 최근 평가가 70점 이상인지부터 확인하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핵심 수치는 30만제곱미터, 전담인력 8명, 운영 3년, 평가 70점이다.

NoteBase